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

5억 넘는 땅 세금 절반 가까이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2% 떨어져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해야 할 토지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아지면 공시지가 인하폭에 따라 세부담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드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7일 공시하는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각각 1.02%와 0.36% 하락했다. 전국 평균 -1.42%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하락률이지만,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광주 6.22%, 전남 4.02%)에 비하면 4~5%포인트 뒷걸음질 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89년 자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외환위기인 1999년(전국 평균 -9.34%)에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천905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 필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된다.

부동산 침체 광주 5개구 모두 하락 전남 여수·함평 지역만 소폭 상승

시·군·구가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개별 필지 가격을 공시하면 이를 기초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광주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5개 자치구 모두 하락했다. 특히 북구와 동구·남구는 광주의 평균 하락률인 1.02%보다 큰 1.72%, 1.30%, 1.11%로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광주시내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과 개발 예정지가 있음에도 도심 상권의 다핵화 등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거래 침체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전국 대비 비교적 낮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는 가격 변동폭이 없는 농경지 및 임야가 많기 때문이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여수와 함평은 소폭 상승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개발 영향으로, 함평은 광주·전남국가산업단지 개발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

반면 무안군은 일부 용도지역 변경 등의 영향으로 2.79%가 하락, 전남지역에서 최고 하락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꾸준히 상승한 점으로 미뤄볼 때 약간의 숨고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토지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토지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억3천398만원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3% 하락했다 가정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총부담은 지난해 327만4천780원에서 올해 189만4천680원으로 4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순위	시·도	표준지수	변동률
	전국	500,000	-1.42%
1	전북	41,923	0.99%
2	인천	12,203	0.34%
3	경남	58,638	-0.27%
4	부산	18,928	-0.28%
5	울산	8,179	-0.31%
6	전남	62,798	-0.36%
7	충남	43,361	-0.42%
8	강원	30,273	-0.50%
9	경북	66,562	-0.62%
10	대구	13,857	-0.96%
11	광주	8,757	-1.02%
12	제주	9,678	-1.13%
13	대전	6,730	-1.17%
14	충북	26,271	-1.17%
15	경기	60,968	-1.60%
16	서울	30,874	-2.26%

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 65%, 종부세 80%로 확정됐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확정됐지만 재산세는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3월30일까지 구·군이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청별관 해법 이번엔...

추진단, 5·18유족·부상자회와 대화 나서 유족회 "기법재단 보고서는 사실 아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을 재개한 5·18유족회·5·18 부상자회와 공식 협상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는 추진단이 그동안 별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았던 두 단체를 사실상 공식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추진단은 지난 17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의 참여 5월 단계 중 하나인 구속부상자회와의 별관 철거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근거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문화전당 공사재개 선인과 함께 같은 날 농성에 돌입한 두 단체에 대해 공사 지연에 따른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5·18유족회와 5·18 부상자회는 26일 광주시 동구 신성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별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 추진단과 다음주 초에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구영 부상자회 정책국장은 "추진단이 유족회, 부상자회측에 공식 만남을 제안해와 참석인원과 협의내용, 실무협상단 구성 등 현안을 조율한 뒤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전당 공사 재개를 원하는 여론을 감안, 어떤 경우에도 추진단과 협의의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별관 원형 보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전제로 시민여론 수렴,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입장인 추진단과의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이들 단체와 대화를 통해 별관 철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

함이 없다"며 "대화의 내용과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향후 대응방침이 정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장은 "이달 말께 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의 건물 철거하고, 3월 중순께 별관을 철거한다는 계획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진단은 현재 이달말께로 예정된 문화전당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측에 공사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요청하는 상태다.

한편, 5·18기법재단이 지난 9일 옛도청별관 철거에 5월단계 대표팀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 전남도청 별관철거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 5월 단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 는 등 양측이 갈음이 깊어지고 있다.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재단이 발간한 보고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분히 작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5월 단계는 "추진단이 5월 단계가 철거에 합의했다는 근거 중 하나인 2006년 2월20일자 공문은 전체 5월 단계가 회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5·18유공자동지회(현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추진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 인용된 추진단의 내부문건(5월 단계가 지난 2005년 6월 18일 추진단과의 만남에서 별관 철거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수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18기법재단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조만간 법률적 대응에 나서려는 한편 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양항 물동량 급감

1월 11만4천 TEU 전년비 22%...환적 화물은 45%나 줄어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들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1월 대비 22.7% 감소한 11만4천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7.8% 감소한 수치다.

환적 화물 또한 1만7천TEU에 그쳐 전년

1월중 3만TEU에 비해 45.2%로 크게 줄었다.

화물별로는 수입 화물이 5만TEU로, 전년(5만7천TEU)에 비해 13.3%가 줄었으며, 전월에 비해서도 6.6%가 감소했다. 수출 화물 또한 4만8천TEU로 전년 1월(6만TEU)에 비해 20.2% 줄면서 수입보다 수출 화물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8년 개장한 광양항은 그동안 20%대의 높은 물동량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지난해 물동량이 182만TEU로, 전년(171만TEU)에 비해 5.4%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광양항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항만과 싱가포르·상하이·홍콩 등 전 세계 주요 항만

도 물동량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항은 17.1%, 인천항은 37.6% 각각 줄었다.

세계 1위 항만인 싱가포르 항도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작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으며, 상하이항과 홍콩 항도 각각 17.0%, 23.2% 감소했다.

이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외의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줄자 전남도는 최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마케팅단을 구성, 광양항 물동량 끌어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광양시와 여수해양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한국건부두공단·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마케팅단을 구성하고, 중국과 유럽·두바이 등지에서 해외 포트세일즈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해양항만 물류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비롯한 산업단지 순회 물동량 유치 홍보 설명회·주요 선사 및 화주 초청 설명회 등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물 경기가 회복하지 않는 한 당분간 물동량 감소 추세는 불가피하다"면서 "공동마케팅기화단 운영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물동량 확보 방안을 추진해 올해 목표인 200만 TEU를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동부 취업 지원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다음 달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입이 200만원인 계층까지도 노동부에서 상담·직업훈련·직장알선 등 취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한했던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취업 패키지 사업은 취약계층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가구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이다. 노동부는 올해는 시범사업인 만큼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월 최저생계비 150%는 1인 가구 73만6천268원, 2인 가구 125만3천645원, 3인 가구 162만1천779원, 4인 가구 235만8천471원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